

[종합·해설]

“파국만 남았다” 29·30일 D-데이?

■ 여야 최종 접촉 결렬 ‘입법전쟁’ 폭풍전야

한 “강행 처리 불사” VS “국회 완전점거” 대처 불가피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협상 시한’인 성탄절(25일)에도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은 8일째 국회상임위원회와 국회의장실에서 점거농성을 벌였다. 이에 한나라당은 정면 충돌을 피한 채 26일 이후 벌어질 입법전쟁(?)을 준비하는 등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최종접촉이 사실상 결렬됨에 따라 극한 대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일부 몰미 전회접촉 시도 외에는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한 여야의 대화는 실종 상태였다.

여야 각 당 지도부는 이날 성탄절 예배에 참석한 뒤 일제히 국회와 당사로 출근해 ‘성탄절 이후’ 정국에 대비했다.

이날 국회는 민주당이 완전 잠악했다. 민주당은 성탄절 비상대기령을 내린 채 국회의장실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 회의장 3곳의 점거를 이어갔다.

FTA 상정안과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한 한나라당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없이는 어떤 대화도 할 수 없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문방위와 국회의장실 등을 잇따라 방문하며 철야 농성을 한 의원들과 보좌진을 격려했다.

민주당은 또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한나라당을 몰아붙였다. 최재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본청 출입구에서 경위들이 의원들의 출입시간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위들로부터 압수한 메모를 보여준 뒤 “경위들에 의해 의원들이

사찰당하고 있다”고 의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또 “국회의 본청 건물 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할 것이라는 제보가 있다”며 “국회 본청 건물마저 권위주의 시대의 감시·사찰 대상이 되는 것을 의장이 자행한다면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통위 폭력사태 관련자로 당 소속 문화직 의원이 고발된 데 대해 “내 지시로 일어난 일인 만큼 나를 고발하라”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공식 일정 없이 하루를 보냈다. 민주당과의 접촉도 사실상 시도하지 않았다. 26일부터 숨가쁘게 진행될 야당과의 결전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원내상황을 진두지휘하는 홍 원내대표 자신은 이날 자택이 아닌 모처에서 정국구상에 몰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박희대 대표는 스스로 협상의 마지막노선으로 설정한 이날을 맞아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을 강력 비판했다.

박 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기본적인 자세를 고쳐야 한다”며 “자신들의 정책이 국민의 불신을 받은 사실을 깨끗이 인정하고 국민이 선택한 정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통위 폭력사태 고발 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해머를 휘두르고 전기톱을 들었던 자들만이 아니라 의사당 반입한 자들까지 모두 색출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의장실 등 점거에는 “대단한 패거리 정치”라며 “이 법안, 저 법안에 요란스런 딱지를 붙이고 때쓰는 ‘떼사부일체’ 민주당”이라고 맹비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지도부 국회의장실 대척회의. 정세균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성탄절인 25일 국회 의장실에서 이른바 ‘쟁점 법안’ 처리와 관련, 여야 대처상황에 대해 대척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사진

여야 ‘중점처리-저지’ 핵심 법안은 미디어법·FTA 비준 등 첨예 대립

한나라당 중점처리법	민주당 극력저지법
혁안 및 헌법불합치법 국민투표법 개정안, 주민투표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피해분야 대책 마련되지 않고, 미국으로부터 행정부와 마찰될 커릴 수 있다는 주장
일몰법 대부담의 동족 및 권유(민사소송법 개정안, 민사소송법 개정안, 헌법 개정안 등)	언론관계법 재발과 보수언론 방송소유를 허용해 여론 왜곡하는 ‘재발중립법’이라는 주장
가관 통제법 한국투자주제국사업, 개정안, 한국항공안전법 개정안, 한국과학기술협력법 개정안 등 14개	반인권·이념법 중립과 사후에 관련된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사이버범죄처벌법 개정안, 집단소송제 개정안, 기업법집행법 개정안, 전자소송 허용,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세출관련법 농어수출보험법 제정안, 교통-에너지 환경사업 제정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 등	반인권법 언론법 개정안(공신선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 개정안(농축재 배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미디어 관련법, 중소기업법 개정안 등
경제살리기법 은행법 개정안(공신선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 개정안(농축재 배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미디어 관련법, 중소기업법 개정안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피해분야 대책 마련되지 않고, 미국으로부터 행정부와 마찰될 커릴 수 있다는 주장

한나라당이 마지막 ‘휴전일’로 뜻밖은 25일 성탄절을 지나며 연말 임시국회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핵심 법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아직까지 대화 의사를 접지는 않고 있지만, 사실상 직권상정이 유일한 방법이란 판단하에 여론 등을 고려해 애초 내세운 100대 처리법안을 A·B·C 등 3등급으로 나누는 분류 작업을 마무리한 상황. 우선 처리대상은 재외국민 참정권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워런 및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안과 일몰법(日沒法·일정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효력이 없어지도록 한 법), 기구 통제법 등 연말 처리가 불가피한 법안과 세출관련 및 경제살리기 법안 등 40~50여개가 거론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등 이른바 사회적 개혁법과 가위냉기식으로 포획된 기법법들은 여론을 감안해 후순위로 밀리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한나라당이 내세운 100대 처리법안 중 극력 저지 대상으로 삼았던 30개법을 15개로 추가 압축하고 전선 준비에 나섰다. 집회·시위 때 복면 착용

을 금지한 집시법 개정안과 사이버범죄의 신상법, 불법집회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허용한 집단소송제법, 휴대전화 감청을 양성화한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모두 저지 대상이다.

우선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위한 목적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산업은행 민영화 등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을 놓고 한나라당은 “반드시 처리” 입장인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극력 저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이 정면 배치된다.

또 신문·방송 경영 허용을 비롯해 한나라당에서 추진중인 신문법 미디어 관련 7개법 개정안도 야당은 ‘경제살리기 법’으로 분류해 가능한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재발과 보수언론을 위한 법개정이란 이유로 결사 저지 입장이다.

임시국회 과정의 결정적 계기가 될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여부도 한나라당은 연내 반드시 처리, 민주당은 미국에서 통과 후 처리 방침을 밝히며 절망하게 대립하는 지점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원칙없는 ‘예산 칼질’

나주시의회, 국·도비 지원금 등 무더기 삭감 논란

나주시의회가 내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국·도비 지원금까지 무더기 삭감해 ‘졸속 예산심사’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나주시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마무리한 예산 심의에서 전체 4천399억원 가운데 2.6%인 89억1천여만원을 삭감, 의결했다. 전남도의회가 올해 4조6천억원 예산 가운데 130여억원을 삭감한 것과 비교해 나주시의회의 삭감 규모는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산물 수출 물류비,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비 등 무려 14억6천여만원에 달하는 국비와 도비 지원액도

삭감했다.

혁신도시건설업무 추진 관련 예산도 항목에 따라 전액 또는 50% 삭감하는 등 평소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던 분야도 칼질했다.

행정안전부의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른 부서 업무추진비 등도 예외 없이 삭감했으며 의원들이 결코 그렇게 여기는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관련 예산도 일부 깎았다.

투자기업 지원 보조금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등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비도 무더기 삭감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무더기 삭감을 고집하는 민주당 측과 이를 반대하는 무소속 의원들이 정면 충돌, 법적 시한을 넘기는 등 파행도 빚어졌다.

이 같은 유례없는 예산 칼질은 과반이 넘는 민주당측 의원들이 무소속 단계를 겨냥한데 지난 7월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빚어졌던 주류, 비주류 간 갈등이 표출됐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간난한 지자체 살림을 들먹이며 국고 지원 타령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면서 정작 국·도비 지원금까지 삭감하는 행태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시의회 정광연 의원위원장은 “행안부의 예산편성 안내서에 따라 예산심의 했으며 구체적 사업계획이 없거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예산은 예외없이 삭감했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형기자 jung@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는 25일 성탄절을 맞아 김수환 추기경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방문,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 추기경에게 “교회에서 성탄예배를 보고 오는 길”이라며 인사를 건넸고, 김 추기경은 “이렇게 누워서 맞게 꽤 겸 미안하다. 바쁘신 대통령께서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김 추기경은 특히 “신문이나 방송

이명박 대통령, 김수환 추기경 문명 쾌차 기원

을 통해 대통령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내가 참 이난다”며 이 대통령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어른이신데 빨리 쾌차하셔서 국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시면 좋겠다”며 쾌유를 기원했고, 이에 김 추기경은 거듭 감

사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분 가량 머문 뒤 자리를 뜨면서 “한번 더 찾아뵙겠다. 오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고, 김 여사는 “쾌차하시도록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전날 입산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편을 통해 난을 보내 김 추기경의 ‘영명축일’(靈名祝日·가톨릭 신자가 자신의 세례명의로 택한 수호성인의 축일)을 축하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김 추기경 위로방문에 앞서 신사동 소방교회에서 열린 성탄예배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이 소방교회를 찾은 것은 지난 3월24일 부활절 예배에 참석한 이후 9개월 만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캐나다, 미국 **한의학사**가 될수있습니다!

www.scukorea.com
문의전화 010-6834-6253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

7.9 공무원 특강

주부특별반 **30 40** 주부특별반 **10기 능력직**

09년 시험안내 **개강** **내년 소방직**

무등고시학원 **www.mdgosl.co.kr** **222-4560**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44년 전통 • 광주지역 최대 합격자 배출!!
본원출신 전국수석 (송은영님 평균 96.7점)

첫진도 (기본서 이론) 개강 1월 2일

주택관리사 "2009년 9월 시험 예상" 첫진도 개강 1월 2일

광주 고시학원

본원 ☎ 227-8003 전남여고 맞은편 3층
합격률 1위 전국수석합격 **새롬 행정고시학원** 본원 ☎ 971-0002 광주은행 칠천동 4층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공인중개사 시험은 역시 새롬!! 19회 시험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50명의 출제 위원급 교수진과 45개 학원 네트워크를 통해 합격시키는 강의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개강 1월 2일(주,아) **주부반, 성인반, 국비지원 재직자반** **국비지원**

목표점 개강 1월 2일 **국비지원**

지역점 ☎ 361-8111 **새롬 행정고시학원** 본원 ☎ 971-0002